‘평창서 평화를 논하다’… 文 대통령 다자외교 스타트

오늘 강릉 IOC 개회식 참석
8일 靑서 美부통령 회동 만찬
中 등 정상인사 13명과 회동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전후해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돌입한다. 소위 ‘평창·평화 외교전’이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5일 강릉 세인트존스 경포호텔에서 열리는 올림픽 개최국 정상에 대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소개행사와 강릉 아트센터에서의 132차 IOC 총회 개회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평창 외교전의 서막을 연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석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전폭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은 IOC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려는 취지라는 게 청와대의 공식 설명이다. 다만 평화올림픽 선언과 함께 평창이 한반도 평화의 기제로 작용해줄 것을 대내외에 알리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가장 눈에 띄는 일정은 개막일 전날인 8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회동과 만찬이다.

비록 정상회담은 아니지만, 펜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방한하는 미 행정부 2인자라는 점에서 내용상으로 간접 정상회담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평창올림픽을 고리로 한 북미접촉 필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번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는 물론 북미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의 ‘입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미 평창올림픽 개막을 일주일 남겨둔 지난 2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올림픽을 계기로 북미대화를 타진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대화 개선의 모멘텀이 지속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며 “펜스 부통령 방한이 이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하는 한정 공산당 상무위원,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 미국을 제외한 13명의 정상급 인사와의 잇단 회동에서도 평창 무대가 북핵 문제의 실마리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원사격’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하나의 관심은 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와의 9일 평창 회담이다.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 악화 와중에 평창행(行)이 어렵사리 성사된 아베 총리와 취임 후 세 번째인 단독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

與 ‘사람중심 성과’ 野 ‘부동산 정책 실기’ 공방 예고

임시국회 與野 대정부질문

5일 정치·통일, 6일 교육·사회 등
3일간 ‘정국주도권’ 선점 격돌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2월 임시국회 정국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설 명절이 2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른바 ‘밥상머리 정치’ 화두를 선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간의 대정부질문은 정치·통일·외교·안보(5일), 경제(6일), 교육·사회·문화(7일) 등 분야별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대정부질문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가상화폐 등 정책들과 개헌, 사법개혁, 평창올림픽 등에 대한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실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야당 질의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과 부동산 정책 논란, 가상화폐 대책 관련 혼선 등에 대한 집중 추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질의자들은 문재인정부의 ‘사람 중심’·‘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 기조들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보완 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며, 가상화폐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당위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대안 마련도 촉구할 예정이다.

정치권의 최대 화두인 개헌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대정부질문에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부터 공약으로 밝혀왔던 만큼 이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정부질문에서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반(反) 개헌 세력’으로 몰아 압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개헌 시기 등을 두고 개헌 진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문제가 됐던 것인데, 대통령 중임제로 개헌한다는 것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개헌 시기도 정부·여당의 속도에 맞출 수 없으며, 시간을 두고 충분한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다.

이밖에도 대정부질문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핵심 쟁점으로 하는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두고도 여야는 확연한 입장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최근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 문제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정책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정부를 향해 ‘굴욕적 외교’ 등을 문제 삼으며 대여(對與)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 질의자들은 지난 8개월 동안의 미국, 중국 등과의 외교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가 과정과 우려 등을 집중 문제제기하며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과 함께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이창원 기자 mediaeco@

미래당, 당헌개정 ‘전당원 투표’ 카드… 민평당은 창당에 속도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가속
내일 민주평화당 공식 출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운영회의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해 만드는 신당의 이름을 ‘미래당’으로 결정한 뒤 당명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조배숙 창준위원장이 지난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통합파는 4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결정지을 전당원 투표를 위한 당헌 개정 작업을 시도하며 통합개혁신당인 미래당 출범 작업에 속도를 냈다.

반면 통합 반대파는 이날 당 로고를 공식 발표했으며, 6일에는 민주평화당 창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등 분당은 ‘초읽기’ 수순에 들어갔다.

우선 이날 국민의당 통합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열고 전당원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당헌 개정 작업을 시도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2·4전당대회를 통해 바른정당과의 통합문제를 매듭지으려 했지만 당원들의 민주평화당 합류로 ‘이중당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불발됐다.

그러자 안철수 대표는 ‘우회로’로 전당원투표를 제시했고, 이에 중앙위원회는 당헌을 개정을, 당무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전당원투표는 8일부터 11일까지 ‘케이보팅’(K-voting)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투표가 진행되면 투표에 참여한 당원 중 절반 이상이 통합에 찬성할 경우 11일 중앙위를 재차 열어 투표 결과를 추인하게 된다. 이후 13일 바른정당과 통합 전당대회를 열어 미래당을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렇듯 전당원투표를 준비하는 동시에 안 대표는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의 공동 정책행보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통합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통합 의지를 부각시키는 행보로 해석되고 있다.

안 대표와 유 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 경비원 및 입주자들과 최저임금 인상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말씀을 들으러 왔다”며 “앞으로 통합 이후 ‘미래당’이 된 후 계속 민생에 도움되는 정책을 열심히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통합파의 속도에 맞춰 통합반대파도 민주평화당 창당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통합반대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로고를 공식 발표하는 행사를 가졌으며, 5일에는 민주평화당 합류 의원 전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 탈당 선언을 할 예정이다.

민주평화당에 합류한 의원은 천정배·정동영·조배숙·박지원·유성엽·장병완·김광수·김경진·김종회·박준영·윤영일·이용주·정인화·최경환·황주홍 의원 등이다.

이후 민주평화당은 6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며, 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합의 추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원 기자

한줄 News

〈정책·사회〉

▲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4일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 사건 피해자이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 3월 새 학기부터 서울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가 배치된다. 폭력사건에 대한 이의제기와 소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

▲ **현대자동차**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서울-평창 간 고속도로 약 190㎞ 구간에서 자율주행에 성공했다.

〈금융·마켓·부동산〉

▲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올해 디지털 영업의 신호탄이 될 슈퍼앱 ‘신한 쏠(SOL)’을 공개했다. 쏠은 기존 금융앱 6개를 모은 통합플랫폼으로, 오는 22일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 증시 활황에도 중소형사들의 M&A(인수·합병)를 위한 매각 속도가 더디다. **SK증권**은 케이프투자증권의 인수가 좌초되면서 다시 매물로 나올 위기다. **이베스트투자증권**도 적정한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유통&라이프〉

▲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업계**의 선물세트 사전 예약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 최근 **유통업계**가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을 활발히 개최하고 있다.